



## 【검토보고서】

2018. 5. 18.(금)  
제 292 회 임시회

#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**양주시의회**  
Yangju City Council

【전문위원 최 상 열】

#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과

가. 제안자 : 양주시장(환경관리과장)

나. 제출일 : 2018년 5월 8일

### 2. 제안이유

가.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개정

나. 상위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피해 주민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상위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기준을 “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비는 포함하지 않는다”를 “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한다”로 개정하고자함(안 제7조)

### 4. 참고사항

1) 입법예고 : 입안방침 결정 후 입법예고 실시

가) 예고기간 : 2018. 4. 9. ~ 4. 28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부서협의 : 입안방침 결정 전 사전협의 실시

가) 협의기간 : 2018. 4. 2. ~ 4. 5.(4일간)

나) 협의결과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의견없음
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개요

- 개정안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임.
- 금번 개정을 통해 법령과 맞지 않는 야생동물의 의한 인명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고,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## 관계법규

- **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)**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,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·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.(각호 생략)
  -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)**
  -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·방조망(防鳥網)·경음기(警音器)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    2. 피해보상기준 :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·임산물·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  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**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(피해보상액 산정)**
  -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,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, 장제비로 최대 1,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. 다만,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.

## 나. 개정 내용

### ○ 피해보상 범위 확대 및 조문 정비(안 제7조)

#### - 개정 조문

현행	개정안
제7조(보상기준) ① 지원금은 <u>예산법</u> 위 내에서 직접피해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피해자가 유고시 그 <u>가족</u> 에게 지급한다.	제7조(보상기준) ① ----- <u>예산법</u> <u>위</u> ----- -. ----- <u>상속인</u> -----.
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<u>가족</u> 이 청구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상속인</u> -----.
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,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<u>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. -----. ----- ----- <u>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한다.</u>

- 현행조례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범위에 사망자의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나, 「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」(환경부고시 제 2018-23호, 2018. 2. 9.)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시 그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고
- 일부 오자와 피해자의 유고시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“상속인”으로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 다. 종합검토 의견

- 금번 개정안은 법령과 다르게 보상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 의견을 따르고,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